

■ ‘10·27법난 30주년 세미나’ 지상중계

“실질적 명예회복·보상 있어야”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불교계를 무참히 유린한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지난 10월29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주최하고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답스님, 조계종 총무부장)가 후원한 ‘10·27법난 세미나’에서 문무왕 동국대 연구위원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명예회복, 보상, 재단 설립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무왕 연구위원은 “명예회복 부분인 역사교육관 건립은 조속한 집행을 통해 국가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왕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0·27법난으로 인해 실추되거나 왜곡된 불교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바로잡아서 불교계의 명예를 깨끗하고 성스러운 상태로 회복

“역사교육관 건립 조속히 집행”

법률적 뒷받침·정부지원 촉구

개인·단체 명예회복 작업 지속

연구소 설립 필요성도 제기돼

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적인 인사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유승무 교수는 “특정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10·27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승무 교수는 문무왕 연구위원이 명예회복(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은 겨우 20~30%만 진행된 상태”라면서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개입했다는 사실 외에 (최종결정권자 등) 밝혀진 게 없다”며 정확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연구소 설립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조기룡 동국대 연구교수는 “조직력과 결속력이 강했다면 (불교계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980년 당시에 정권을 (무력으로)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희생이 필요했다”면서 “불교가 그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의 10·27법난 사과와 이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하는데 심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으며,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고 비판했

다. 문무왕 연구위원 또한 “법난으로 인해 신도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입장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은 “올해는 10·27법난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과 위원회 지원에 전폭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스님은 “10·27법난 명예회복은 바람직한 정교관계(政教關係)를 정립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이정표이며, 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부와 불교계의 발전적인 관계정립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스님은 “하루 빨리 법난의 아픔이 치유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장의 사회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와 문무왕 동국대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조기룡 동국대 연구교수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각각 논평을 한 후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스님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 기금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군종특별교구장 자람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스님.

보광사 용문사 논산훈련소 법당 기금 전달

초격스님 2000만원, 호산스님 1000만원 기탁

당해 사찰의 시급한 불사에도 불구하고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에 동참하는 사찰이 잇따르고 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초격스님(파주 보광사 주지)과 양평 용문사 주지 호산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각각 2000만원,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초격스님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해 받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15대 중앙종회 당선자 가운데 제일 먼저 군포교 기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최근 요사채 화재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큰마음’을 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호산스님

밝혔다.

이어 2일에는 매년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양평 용문사 주지 호산스님이 기금 1000만원을 보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군법당 기금을 기탁해 주어 고맙다”면서 “심시일반으로 동참하게 될 경우 10명이

면 1억이고, 100명이면 10억이 된다”고 치하했다. 이에 대해 호산스님은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은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며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와 관련 호산스님은 “동계올림픽에서 ‘눈 종목’에서는 메달을 딴 적이 없으니, 불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꿈나무를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헬멧 앞에는 (조계종 종단 문양인) ‘삼법인’을 붙이고, 뒤에는 ‘용문사’라고 붙이리라”고 당부하면서 대화유치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문무왕 연구위원 발제

“2008년 3월28일 제정된 후 2010년 1월25일 일부 개정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이 법이 명예회복 등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명예회복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어 보상에 관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오직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만 언급



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요구되는 부분은 빠져 있다. 법률과 시행령 상으로 보상에 관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명예회복 부분만이 존재한다.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도 역사교육관 지원 기타사항으로 나뉘는데 명예회복을 위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은 의료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여타 과거사법과는 달리 보상금 항목이 빠진 것

은 문제가 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보면, 법률 제정 목적은 대동소이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0·27법’은 명예회복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상에 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법과의 형

평성 문제에서 다시 고려돼야 한다.

명예회복 부분인 역사교육관 건립은 조속한 집행을 통해 국가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개인 및 단체의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재단 내지 연구소와 같은 형태의 연구,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불교계 차원에서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차원이 아닌 불교계 차원에서 명예회복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

10·27법난이 발발한지 30년을 맞았다. 종단이 주체가 돼 법회를 열고 의미를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10·27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젊은 스님들과 청년불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10·27법난은 사건 당시부터 정부 차원의 사과가 처음으로 나온 1988년까지 진행된 연속 사건이다. 법난 진상규명을 위해 10년 가까이 스님들과 청년불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80

10·27 법난 30년, 잊혀진 사람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년대 중반부터 제등행렬 때면 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되는 학생이 속출했다. 진상규명 유인물을 소지한 죄로 연행돼 처벌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군에서 혹은 취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도 적지 않

았다. 젊은 스님들은 사회와 종단의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그들 중 일부는 중생과 함께 한다며 공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10·27법난과 관련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뒤 우리 내부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규명해야한다. 그리고 당시 청년불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위로의 말 한 마디쯤 건네기를 권한다. 그것만으로도 10·27로 인해 청춘을 던졌던 불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봉정법회

전국선원수좌회 ‘선원청규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해오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가 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 전에 그 편찬의 결실을 고하는 <선원청규봉정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 일 시 _ 불기 2554(2010)년 11월 10일(수) 오후 4시
- 장 소 _ 조계사 대웅전
- 문 의 _ 02) 2011-1818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선원청규편찬위원회